

## 세기적 전환기의 동아시아 신질서와 한중관계: 기회와 제약

양길현\*

### 1. 머리말

1992년 8월 24일 북경의 조어대 국민관에서 전기침 외교부장과 한국의 이상옥 외무부장관간에 수교협정이 체결되어 한중 양국간에 수교가 달성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장쩌민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중우호관계는 더욱 긴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8년 11월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지금까지의 선린우호 협력 관계에서 한단계 높은 21세기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한중수교와 두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의 만남은 모두가 일차적으로는 한중간 호혜적 경제교류를 더 한층 확대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양국간 합의의 과정이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중관계의 꾸준한 성과와 진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21세기로의 전환을 전후하여 한중관계가 어떤 기회와 제약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새로이 보여주고 있는 강대국간 역학구도의 특성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간 쌍무적 이해관계의 변화가 자체내의 역동성을 갖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중관계에서 어떤 가능성과 제약을 보이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필자가 피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단극다중심체제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동아시아 신질서는 과거의 냉전질서와 비교할 때 미국의 패권이라는 세력 불균형이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강대국들간의 견제와 협조가 교차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중관계는 이러한 동아시아 신질서의 특성과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 둘째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교류협력의 증대라는 실용주의적 호혜성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진전과 새로운 면모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3) 셋째 21세기 한중관계가 불안정 내지는 불확실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동아시아 신질서에서 견제와 협조를 보이는 중미관계의 양면성 그리고 북한의 안정과 변화라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이게 될 북한변수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2. 세기적 전환기의 동아시아 신질서: 단극다중심질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을 불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어떤 특성과 미래정향을 보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2차대전 이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특히 1989년 이후 소위 탈냉전이라 불리우는 세계사적 변혁 이후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1989년 12월 미소간의 몰타회담 이후 공식화된 냉전체제의 종식은 동구의 민주화,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걸프전 등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국제질서'를 태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널리 파악되고 있다.(김희연 1998, 427) 여기서 의미하는 신국제질서의 태동이란 과거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여타의 강대국들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단극다중심체제(unipolycentrism)를 출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sup>

그러나 필자는 미국 해계모니하의 다중심적 질서를 의미하는 단극다중심체제가 1989년 이후 소위 탈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현하고 있다는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필자가 보건대 단극다중심체제는 2차대전 이후 소위 냉전질서 하에서도 어김없이 관철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냉전질서를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소련의 국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거나 아니면 소련의 군사력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양분논리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물론 구소련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적이고 미·영 등의 서구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호소력과 대항력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국제질서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독주에 대한 소련과 중국<sup>2)</sup> 또는 프랑스의 견제, 혹은 미국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로까지 성장해 나가는 독일과 일본의 경쟁이 있었을 뿐, 이들 중 그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는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위치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1989년 이전의 냉전적 국제질서를 미소의 양극 질서로 규정하는 것은 2차대전 이후 1989년까지의 4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1991년 구소련의 해체가 국제질서에 주는 의미는 이로 인해 미소의 양극적 질서가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기 보다는 미국에 이어 2등국가의 위치를 고수하려던 구소련이 뒤쳐지게 되고 이 자리를 중국이 대신 메꾸려는 강대국간 역학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신국제질서의 태동과 관련하여 강대국들간의 다중심 보다는 미국의 해계모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박건영은 현금의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이며”(박건영 1999, 52),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취약성이 노정되자 더욱 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Park and Lee 1999, 7)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냉전 시기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희망과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용권력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능숙하게 처신”(서진영 1997, 416)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데, 이처럼 냉전시기에 있어 중국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제3의 독특한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화 논리가 서구중심적 편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1989년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민주화라는 세계사적 변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강조하고 군사적 능력을 최우선시 하는 종래의 국제정치적 사고에서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변혁적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이란 분명 그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서 미·소간의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종식되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의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처럼 2차대전 이후 줄곧 미국 주도의 단극다중심체제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강대국들의 도전과 견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야말로 21세기로의 전환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내에서의 강대국관계와 그 내부적 동학을 규정하는 기본적 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1999년 현재 탈냉전기 동아시아를 보면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의 쟁점에 따라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반된 양상이 표출”(안승국 1999, 25)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탈냉전기 동아시아 정세에도 쟁점별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이전 냉전시기의 동아시아 질서와 비교할 때 현재의 탈냉전기 동아시아 신질서는 미국 헤게모니하의 다강대국간 협조적 성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데에서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협금의 동아시아 신질서 하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줄곧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하고 여타의 강대국들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이른바 단극다중심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 있어 현실주의의 논리와 성향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모두에서 유감없이 관철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특히 1989년 이후 동아시아의 단극다중심질서가 갈등과 대립을 우선축으로 하는 견제와 균형 보다는 교류와 상호의존을 중시하는 평화공존과 협력의 정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데서 21세기로의 전환기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면모이자 탈냉전이라 지칭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협조적 정향의 단극다중심적 동아시아 질서가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동아시아에서 단극으로 규정되는 세력의 불균형이란 미국이 패권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질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고 혹은 어떻게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계속 실현되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유무역의 세계경제질서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자유무역의 세계경제에서 이탈하거나 고립될 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세계시장의 구조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히 1989년 이후 탈냉전이라는 이름하에 국제질서가 경제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21세기로의 전환기 동아시아 질서가 불균형과 협조적 정향을 띠도록 하는 기본적 동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강대국들의 다극적 선호와 반패권적 정향이 탈냉전 시대에 와서도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다극화 추구는 동아시아에서도 그래도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서 21세기 동아시아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가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도록 중국을 선봉으로 하여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로부터의 다중심적 견제요인이 또 한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중국 선봉의 대미견제는 1989년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가 주로 소련으로부터 주어졌던 냉전질서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탈냉전기 동아시아 신질서는 냉전 시기의 견제와 균형과는 달리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이른바 견제와 협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태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중국이 예상되는 수출부진을 무릅쓰면서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자제하는<sup>3)</sup> 등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협조를 보인 것은 탈냉전 시기의 동아시아 신질서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패권적 주도에 대한 견제와 함께 "아시아 경제질서의 최후의 방화벽"(이영길 1998, 162)으로 기능하리라 기대되는 중국<sup>4)</sup>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양면적인 증미관계가 탈냉전기 국제질서 및 동아시아 신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1999년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중심적 협조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전세계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의 통합과 경쟁을 벌여나감에 따라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미국의 주도하는 세계시장의 파고에 순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간에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조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의 추세는 이것이 미래의 정치적 다원화의 가능성을 배태하리라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낳는 가운데서도 경제적 필요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꾸준히 지속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 한중관계 역시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심화 그리고 대외개방의 압박이라는 세계사적 추세에 부응하여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는 더욱 적극성을 띠며 전개되어 나가리라 볼 것이다.

3)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일본의 책임회피 자세와는 달리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함은 물론이고 한국, 태국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20억 내지 30억 달러의 지원의사를 밝히는--실제로 태국에 대해서는 10억 달러를 긴급지원함-- 등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책임까지도 담당하려 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조선일보>, 1998년 1월 21일)

4) 중국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1)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쳐 중국은 이미 당면한 경제개혁-개방의 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2)아시아 금융위기가 장쩌민으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함으로 해서 정치적 대처능력이 보다 제고되어 있었다는 점, 3)중국의 경우 외채가 1998년 중반의 시점에서 볼 때 관리가능할 정도인 1,300억달러의 외채, 440억달러의 무역흑자, 그리고 1,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등 경제적 하부구조가 탄탄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o 1999, 7-9)

3) 경제적 상호의존과 세계시장에서의 협력과 경쟁이 동아시아 각국의 대외관계를 규정짓는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에서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냉전시대의 쌍무적 협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미일간의 안보협력체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중러와 북중 그리고 북러간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정도의 혈맹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호협조적 안보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안보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유사시의 대비와 억제라는 소극적 방위의 성향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 국가들간에 쌍무적인 안보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관계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각국이 저마다 자구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에 들어서도 한중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치적 파급효과로 변모와 진전을 보이는 동시에 그러한 진전이 어느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어 나가는 것을 제약받게 되는 두 축을 오가리라 본다. 이는 21세기 한중관계가 종국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이 극적으로 해소되기까지는 정치,군사적 관계를 중시여기는 북중관계와 합수관계를 맺으면서 진퇴를 거듭해 나갈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 3. 세기적 전환기의 한중관계: 공통의 목표와 추세

한중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공식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는 한국의 대중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내지는 대한정책과의 만남인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등거리정책은 1998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붕 총리가 재천명했듯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수호하고 한국과의 호혜협력을 촉진”(《인민일보》, 1998년 3월 6일)해 나간다는 기본 전제하에 구체적 목표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금희연 1998, 436)에 두고 있다고 보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정세의 완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대북관계에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창출하며, 광대한 중국의 시장성과 자원에 착안, 양국간 경제무역 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발전”(이영주 1998, 231-232)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중관계가 지향하는 공통의 이해와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21세기로의 전환시점에서 이 두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 한중관계가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세 내지는 변화 가능성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어떤 기회와 제약을 보이게 될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한중관계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중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다. 21세기로의 세기적 전환기에서 한중관계가 진전과 개선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중국<sup>5)</sup>과 한국이 모

두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의 부재라는 의미의 소극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으로서 서로가 중요시해 왔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한중관계의 공동된 목표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중 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북한 변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이유 그리고 정치이념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전략적 방벽”(이회옥 1997/8, 46, 주44)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하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고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시에 중국은 1990년대 탈냉전이란 세계사적 대변혁의 흐름에 발맞추어 북한과의 관계를 “역사특수적인 관계에서 보편적인 상호선린관계”(이회옥 1997/8, 45)로 조정해 나가고자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남한 주도의 남북한통일을 달성한다는 종래의 조급한 민족주의적 열망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 모두 대북한 정책에서 변화와 상호 일치점을 보이게 됨에 따라 한중관계가 새로운 전환과 발전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1992년의 한중수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데 이어 동년 12월 남북한간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한관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한반도의 안정화가 중요한 조건으로서 작용하였듯이,<sup>5)</sup> 향후 21세기 한중관계의 진전과 기회는 남북한관계의 해빙과 평화공존로부터 주어지리라 기대된다. 이렇게 본다면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정권의 등장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 동북아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중국이나 한국 모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이를 바라보는 한중간의 이해관계마저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소 견해차이를 노정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 김정일정권의 안정이라는 현상유지 방향으로 합의의 볼 수 있음으로 해서 21세기로의 전환기에서 한중관계가 보다 탄탄한 공동의 토대에 기반하여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폐쇄적이고 강고한 주민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서 만에 하나 내부적 소요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그 와중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 그리고 남북한관계의 적대적 대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핵무기라든가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학살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sup>6)</sup>이

5) 중국은 대외무역이 GNP의 40%를 초과하고 외자도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대외의존형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다.(노재원 1999, 34) 물론 중국경제의 대외의존 지표는 인도네시아의 51%, 한국의 69%, 태국의 83%, 필리핀의 94%, 홍콩의 285%, 싱가포르의 356%에 비하면 낮다.(내 1999, 9)

6) 물론 1992년의 한중수교는 1991년을 전후한 남북한관계의 긴장완화 분위기 외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 그리고 동서냉전의 와해라는 요인들에 힘입은 것이었다.(이영주 1998, 136-137)

7)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축이라든가 핵무기개발과 같은 군사적 쟁점에서의 한중간 인식의 공유는 대표적으로 최근(1999년 6월 7일) 한중간의 첫 군축협약에서도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및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해야

향후 21세기 한중관계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로의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북한 변수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간에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저지하는 것, 2)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을 봉쇄하거나 자극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것, 3)북한의 내부붕괴를 유도하지 않는 것, 4)북한을 중국식의 개혁·개방으로 유인하는 것, 5)한반도 주변 4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박건영 1999, 136-146) 이러한 한중간 합의의 지향점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의 정치적 존립과 안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sup>8)</sup> 특히 대외경제관계에서의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떠나가도록 유인한다는 정책은 북한의 경제개방이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게 되면 김정일정권이 그러한 성과만큼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나 예측불허의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리리라는 한중간의 공통된 기대에서 나온 대안이다. 그리고 김영삼정부때의 4자회담 제안이나 최근 김대중정부의 6자회담안 모두 그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역할의 차이라는 방법론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리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2) 경제적 호혜성에 기초한 한중관계

1992년 8월 24일의 한중수교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호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하면서도 일면 대세순응적인 새로운 출발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탈냉전 시기의 세계사적 변혁이 경제적 호혜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과 중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수교를 통해 경제적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남북한관계의 특수한 대결을 염두에 두면서도 “북한과는 정치적·군사적 관계 유지, 한국과는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김희연 1998, 416)라는 정경분리정책의 일환으로 한중수교에 임해 왔다. 그러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진행된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상호의존의 심화는 한중관계가 단순히 정경분리에 한정되기가 어렵도록 하는 자체의 역동성과 정치적 파장

---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겨레신문〉, 1999년 6월 9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북한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면 분단의 고착화라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대가로 치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김영화 1998, 201) 그러나 21세기로의 전환시점에서 동아시아 신질서의 중심축이 안정적인 현상유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남북한으로서는 우선은 남북한 정치통합이라는 결과로서의 통일보다는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증진이라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지향점이 상호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면 남북한관계 개선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가 쉬운 통일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며 평화적인 자세로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에 치중하는 것이 보다 실사구시적인 남북한관계라고 볼 것이다.(박건영 1999, 177-178)

을 몰고 오게 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5년이 지나면서 한중 교역규모는 1996년 199.2억불(수출 113.8억불, 수입 85.4억불)과 1997년 235.5억불(수출 135.7억불, 수입 99.8억불)에 이르고 있어(통계청 1998, 210-213),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교역국이 되었고 중국도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 될 정도로 경제적 상호 의존과 경제교류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한중간 교역이 연평균 20-30%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2001년에는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수교 첫해의 8배에 해당하는 500억불로 확대되리라 기대되는 등 한중간 경제교류·협력은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한중간 투자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방직·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형 투자가 동북3성과 발해만 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중화학·전자·통신·원자력 등 자본집약적 대기업형 투자와 병행하여 상해 등 장강 3각주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전낙희 1999, 43)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를 보면 수교 당시인 1992년에 260건에 2억 2,090만 달러이던 것이 1993년에는 630건에 5억 7,030만 달러, 1996년에는 2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1998년 상반기에만 해도 3,546건에 45억 8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총 해외투자 건수의 51.5%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다.(전낙희 1999, 43) 그리고 한중수교 당시 한국이 약속한 무상원조도 1993년부터 지원되어 1997년 말까지 총 1,5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금희연 1998, 443)

이와 같은 한중간 경제적 교류협력의 증대는 21세기 한중관계가 원래 중국이 의도한 대로 정경분리에 기반한 경제적 협력관계에만 한정되기 어려운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데서 21세기 한중관계의 가능성과 기회를 엿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중간 경제교류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관계의 면모를 변화시키게 되면서 21세기 한중관계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증진과 함께 동아시아에 있어 한중간의 정치적·군사적 협조로까지 나아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4. 결 론 : 21세기 한중관계의 기회와 제약

21세기 한중관계는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지난 세기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리라 전망된다. 이처럼 한중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호혜적 측면이 적지 않다는 상호 실리적인 차원의 것이다. 또 하나 21세기 한중관계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정향을 보이리라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과 중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긴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1세기 한중관계가 마냥 장미빛의 낙관적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중요한 제약 요인은 중미관계의 “이중성”(이희옥 1997/8, 35)으로부터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한편으로는 정상회담이나 고위회담을 통해 관계증진과 호혜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동북아에 있어서 쌍무적 협력과 다자간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미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상호견제의 갈등적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관계를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방적인 강권행사 성향을 보이고 있는가 하



면 내정간섭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대해 반패권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sup>9)</sup>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주권적 이익<sup>10)</sup>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이나 갈등적 무력대결까지도 감수하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영화 1998, 199)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위협론<sup>11)</sup>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군사위기를 둘러싸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한 바도 있지만, 특히 1996년 4월 미일신안보선언에 이어 1997년 9월 미일 양국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신방위협력지침<sup>12)</sup>은 일본에 대해 공세적 방위로의 전환을 용인해 줌으로써 중국위협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견제의 표현인 것으로 볼 것이다.<sup>13)</sup> 이처럼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견제와 갈등 또는 대결적 양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sup>14)</sup>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한미관계를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중미관계와의 연계와 조정을 거치면서 21세기 한중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구조적 제약하에 놓여있다.

21세기 한중관계가 일정한 수준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대한반도 등거리정책과 不統不亂(통일과 혼란을 모두 바라지 않는) 입장으로부터 나온다. 중국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동북아시아에서의 불안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의 조기붕괴나 남한 주도의 남북한통일과 같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열망이나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한중관계는, 한국이 조기통일에 정책목표를 두는 한, 북중관계라는 또 하나의 동북아 국제정세의 축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 한반도내의 현상타파를 추구하지 않는 한 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안정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21세기의 한중관계는 일정한 수준하에서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sup>15)</sup>

- 
- 9) 1996년 4월 중러공동성명은 다분히 미국을 겨냥하여 “국제사회에는 패권정치와 강권정치가 여전히 존재”(〈한겨레신문〉, 1996년 4월 26일)하고 있음을 언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패권추구에 대해 의혹과 우려 그리고 비판과 견제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반패권적 자세는 1972년 중미간의 상해공동선언에서 천명된 반패권이 소련을 견제하려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20년이 지나서도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국-중국-소련간 3각관계의 역학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10) 이호철 역시 탈냉전기 중국의 대동아시아 외교정책은 주권적 이익과 같은 민족주의와 경제적 상호의존간의 손익을 신중하게 계산하는 가운데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전개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다. (Lee 1999, 17)
- 11) 경제대국화와 군사대국화 그리고 중화민족주의 경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의 실상과 허상을 논의하고 있는 서진영 1997, 430-435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영주는 “중국의 사회주의제도는 반식민지, 반봉건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것으로, 제국주의 바탕 위에서 탄생한 강한 소비니즘 색채의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다르다”(이영주 1998, 216)는 입장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경쟁자로서 중국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이영주 1998, 220)
- 12)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일본은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병참 및 후방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일본자위대가 수송정비, 기뢰제거 및 공해상에서 선박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승국 1999, 31)
- 13) 중국은 미일신안보선언과 그에 따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대평양 위에 탄생한 새로운 NATO’라고 비난하고 있다.(박건영 1999, 64)
- 14) 중미관계는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국제관계 중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이영주 1998, 209)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금희연. 1998. "한·중관계의 특성과 한계," 김달중 편저,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
- 김영화. 1998. "동북아 신기류하에서의 새로운 한·중·북 관계: 한·중·북의 새로운 리더쉽의 등장 중심으로," <중소연구>, 22권 3호, 가을.
- 노재원. 1999. "대중외교: 한반도의 장래와 중국과의 관계," <아태Focus>, 5월.
- 박건영. 1999. <한반도의 국제정치>. 서울: 오름.
- 서진영. 1997.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 안승국. 1999. "동북아지역 동향,"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태평양 1998-199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영길. 1998. "21세기 한중관계의 신지평," <국방논총>, 제44호, 겨울.
- 이영주. 1998.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서울: 나남.
- 이희욱. 1997/8. "대중화경제권과 한중정치관계," <중소연구>, 21권 4호, 겨울.  
<인민일보>, 1998년 3월 6일.
- 전낙희. 1999. "한·중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국제문제>, 1월.  
<조선일보>, 1998년 1월 21일.
- 통계청. 1998. <한국통계월보>. 8월.
-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26일.
- <한겨레신문>, 1999년 6월 9일.
- Lee, Hochul. 1999. "Prudent Realpolitik with Possible Nationalist Swing: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y 27-28, co-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enter for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
- Park, Kun Young and Lee, Wang Hwi. 1999. "The Financial Crisis of 1997-8 and Its Impact on the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y 27-28, co-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enter for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
- So, Alvin Y. 1999. "China Under the Shadow of Asian Financial Crisis: Retreat from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y 27-28, co-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enter for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

---

15) 이 점에서 한국이 '북한없는 아시아' 협력정책을 특히 중국에 대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진영(1997, 450)과 이희욱(1997/8, 52)의 지적은 한국-중국-북한간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